

# 이낙연-이재명 공방 '위험 수위'

## 이재명측, 당선관위에 공명선거 촉구서 제출...“엄중 조치” 이낙연측 “손바닥으로 달 가리며 묻지 말라? 기가 찬다”

더불어민주당 양강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방이 위급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막말 설전을 넘어 상대를 향해 위협 가능성마저 주장하며 끝장 대치를 벌이는 형국이다.

잡잡한 듯했던 '명낙대전'이 재점화한 것은 이 지사를 둘러싼 '무료 변론' 논란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이낙연 캠프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며 "당 선관위에 공명선거

촉구서를 낸 것은 1단계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는 전날 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위반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제출했다.

캠프는 보도자료에서 "이낙연 캠프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민주당 특별당규 등을 위반해 대통령 경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당 선관위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촉구서에 허위사실 유포자로

이낙연 캠프의 운영한 정부실장, 정운현 공보단장, 박래용 대변인, 박병석 전략본부 팀장 등 4명의 실명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허위 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42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과거 변호사 수임비용 일체만 밝히면 해결될 사안이라며 연일 압박했다. 앞서 캠프

는 당 윤리감찰단의 자체 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료변론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라며 "현행법 위반 혐의는 불공정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고발만 3건이다. 복수 단계의 고발에도 국가기관에서 수사하지 않을 재간은 없을 것"이라며 "이 지사가 정

확하게 소명하지 않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보수 야당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볼 보듯 뻔하다"고 했다.

전날 이 지사와 SNS에서 설전을 벌였던 운영찬 의원은 공세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그쪽은 자꾸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면서 내 손을 봤으니 달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더는 묻지 말라고 한다"며 "이건 공방의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캠프에서 스스로 밝혀야 할 사안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정운현 캠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윤 의원의 SNS 게시글을 소개하며 "뭘 권 사담이 성낸다더니, 기가 찬다"며 이 지사를 비난했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지사는 화를 낼 게 아니라 변호사 수임 비용만 밝히면 된다. 모수를 알아야 이 지사의 재산변동 내역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 검증을 해야야 만에 하나 이 지사가 본선에 가도 안전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 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률·예산안 심의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오는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3-16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25일 열린다.

인문중재법을 포함한 법안 안전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걸쳐 개최한다.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침으로써 실정론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아내고 국정 성과를 드러냄으로써 정권 재창조 기반을 구축하려는 민주당 간에 '청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용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혐미경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 여의도 클릭

## 군 성범죄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

### 소병철 발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하게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 민간법원이 담당하게 된 것은 군인의 인권 보장에 진일보한 것"이라며 "그러나 평시에는 군인들에 대한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저의 개정안이 부분적으로만



대안에 반영되어 안타깝다. 군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반드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공군, 해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는 진정성과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국군을 지휘하느냐"라고 지적하며 "지금 시대는 바뀌었다. 지휘관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강군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 강군이 되려면 군인들의 인권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진수기자

## 신정훈, 내년 나주·화순 신규사업 12건 확보

### 총사업비 1조4천626억 규모, 예결위원으로 당국 설득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 가운데, 내년도 나주·화순 지역 주요 신규사업이 총 12건, 사업비 규모로는 무려 1조4천6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나주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총사업비 9천억)', '화순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노베이션 랩 구축(총사업비 450억)',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호선 확장(총사업비 3천64억)' 등 나주·화

순의 미래 성장동력, 지역 현안사업, SOC 등 굵직굵직한 사업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개교와 함께 호남이 앞으로 국가 과학기술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화순의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노베이션 랩 구축사업',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430



억)' 등 바이오·백신 분야 신규사업의 경우,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따라, 전남이 우리나라 K-백신을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나주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25억) ▲나주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145억) ▲나주 EV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체계 구축·운영(450억)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본원 증축

추진(234억) ▲나주 도시숲 조성(국립 Forest Play Zone 조성) 사업(100억) ▲화순 팜타이드 의약품 연구개발 기반 구축(220억) ▲화순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상용화연계 고도화사업(86억) ▲화순 꿀벌 밀원순 조성사업(22억) 등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정부 예산안 확정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당국 설득 노력을 경주해온 신 의원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로 정부 각 부처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면서, "이 같은 성과는 막판까지 함께 노력해 온 전남도와 나주·화순 관계자들, 그리고 조인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 주민 덕분"이라며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다. /김진수기자

## 사립학교 교사 채용, 교육감 위탁 의무화

### 윤영덕 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전형 등을 통해 임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 채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5%, 2020년 63.2%, 2021년 67.2%의 사립학교가 위탁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일부 사학에서의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교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다"면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만 사학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중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나이스3L (캐노피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352-3010 (내선2번)**  
**061)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광주중앙영광지사 010-3611-5251  
광양대리점 010-5355-1292  
나주대리점 010-3626-3848

함평대리점 010-2602-6501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